

# 광주 사립학교, 교사 안뽑는다… 5명 중 1명은 기간제

신규 교사 총원 사설상 무산  
2016년부터 채용 거의 없어  
빈 자리 기간제 교사가 채워  
신뢰·학습권 하락 등 부작용  
채용 감소 공립까지 이어져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교 정규직 신규 교원 총원이 수년째 꽉 막혔다. 광주시교육청이 공동전형에 의한 사립교원 위탁 채용을 요구하고 사학법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신규 교사 채용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가 메웠고 현재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수는 1000명에 육박해 전체 사립교원 5명 중 1명 이상이 기간제 교사다. 사립학교의 이같은 비정상적인 교원 운영은 학생 학습권 침해와 공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감소로까지 이어지는 등 학교 현장에 각종 부작용을 놓고 있다.

특히 이를 해결할 교육청과 사학법인 협의회의 위탁 채용 협상조차 최근 결렬돼 지역 교육계의 이 같은 시름은 당분간



광주시교육청.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광주 사립학교 신규채용은 2016학년도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014~2015학년도에 각각 109명·114명을 채용했지만 2016학년도에는 고작 4명에 그쳤고 2017학년도에도 16명을 뽑는 데 그쳤다.

이같은 채용 인원 급감 이유는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방식을 바꾸자고 사학들에게 요구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사학 자체에 맡겼던 교원 채용을 교육청이 위탁받아 공동전형으로하겠다고 제안했다.

채용비리를 막겠다는 것이 취지였지만 사학법인협의회는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에게 덮어씌워 사학 고유권한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양측은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교육청의 사립학교 신규채용 승인 중단도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사학법인회 관계자는 “공동전형을 놓고 교육청과 사학간 협의가 진척을 보지 못해 학교 교원 운영은 물론 학급수와 전체 교원 수 조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규 총원이 없는 사이 2014~2018년 광주 사립 중·고 학급 수는 92개 학급이 줄었으며 정규교원 숫자도 507명 감소했다.

신규 교사를 채용해야 할 빈자리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대신 채웠다.

2014년과 540명이었던 사립 중·고 기간제 교사는 이후 매년 급증해 2017년 690명, 올해는 1학기 말 현재 905명으로 늘었다. 학교별로는 중학교 189명, 고등학교 581명 사립특수학교 29명, 사립초 10명, 대체 기간제 150명 등이다.

특히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경우 4년 전 374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64%나 폭증한 상태다.

기간제교사의 잔은 이직은 학생과 교사간 신뢰 하락과 함께 생활·학습지도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립학교 학급 수 감소 등으로 발생한 과원 교사의 공립 학교 순환근무 등으로 공립 교사의 신규

임용 인원까지 줄어들게 하고 있다.

한 사립 고등학교 관계자는 “한 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30여 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 정규교원과 불필요한 갈등 야기 등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다”며 “이 모든 부작용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은 사립학교 공동전형·위탁 채용 논의를 마무리하지 않고서는 신규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간제교사도 숫자가 유독 많은 학교가 일부 있지만, 광주 전체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은 23%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6개 사학법인이 지난해 위탁 채용 시범 운영에 참여해 신규채용을 했던 점도 강조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2016학년도부터 갑자기 신규채용이 줄어든 것은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돼 채용 과정이 까다로워진 면도 있다”며 “채용비리 근절과 공공성 확보라는 대원칙에는 모두 동의하는 만큼 조속히 성과를 거둬 신규채용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즐거운 ‘제 2회 인천 생활문화축제’

데 ‘제2회 인천 생활문화축제 생동감’ 행사를 개최됐다. 인천 생활문화축제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동아리 회원들이 주인공이 돼 무대, 공연, 운영 등 행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준비하고 운영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개발 착수

경기도는 이제명 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안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1차 추경예산을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 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용역은 5~6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며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허용하는 도민환원제 방식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용역에서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

델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 지사가 성남시 장 시절 시행한 대장동 결합개발 방식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남단인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천여㎡를 택지로 공영개발해 얻은 이익 5천503억원 중 920억원을 인근 도로·터널 개설 등에 썼고, 2천761억원을 수정구 신흥동 일원 옛 1공단 용지 매입과 공원 조성 사업비로 투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1822억원을 시민에게 배당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나왔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함평군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오는 10월1일부터 ‘1천원’으로 함평군 관내 어디든 갈 수 있게 된다.

16일 군에 따르면,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지난 14일 군청에서 함평교통 하종갑 대표, 함평군민교통 김영남 대표와 함께 ‘함평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이용객 모두 다음달 1일부터 함평군 관내라면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만 내면 된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같은 구간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군민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전남 함평=양수녕 기자 ysn6313@

## 광주 동구, 소상공인 창업·일자리 창출 팔 걷어

### 5개 유관기관과 지원사업 업무협약

광주 동구가 지난 14일 구청 상황실에서 5개 유관기관과 소상공인 창업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역량강화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선대학 교신학협력단, 조선이공대신학협력단 등 5개 기관이 힘을 모았다.

주요 협약내용은 ▲소상공인 창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 종합 계획 수립 ▲지역특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산학 연구 협력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교



지난 14일 구청 상황실에서 5개 유관기관과 소상공인 창업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육·정책자금 등 지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및 과제 발굴 ▲여성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등이다.

동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학교 링크(LINC+)사업단과 연계한 ‘글로벌 청년일자리지원 플랫폼’ 운영을 시작으로

청년·경력단절여성·신중년·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5개 기관과 함께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갖추고, 유관기관의 인프리를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지원해 지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봉채영 기자



14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광주광역시

## 대구서 ‘대구·광주 지방분권’ 실현 전략 모색

### 영호남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지난 14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등 지방분권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영호남 토론회는 2016년 달빛동맹 협력체제로 ‘지방분권 공동협력’이 선정되면서 3년째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방

분권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광주·대구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분권·재정연구팀장이 ‘법률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방안’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에 대해 김대현 광주시 위민위원장,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을 펼쳤다.

/경기 양주=고성철 기자 ksc@



천일홍 축제현장

/양주시